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2022년 5월 19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1.3만 km <sup>2</sup> 	<b>인구</b> 3,780만 명 (2021 <sup>e</sup> ) 	<b>정치체제</b> 의원내각제 	<b>대외정책</b> 친미국, 반러시아 
<b>GDP</b> 6,741억 달러 (2021 <sup>e</sup> ) 	<b>1인당 GDP</b> 17,815달러 (2021 <sup>e</sup> ) 	<b>통화단위</b> Zloty (Zl) 	<b>환율(U\$기준)</b> 3.86 (2021 <sup>e</sup> ) 

-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및 리투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유럽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과 낮은 제조비용 등을 활용하여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EU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점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인구는 3,780만 명, GDP는 6,741억 달러(추정)로 여타 비세그라드 회원국(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와 비교적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음.
- 2004년 EU 가입 이후 EU 회원국들과의 교역 확대, 꾸준한 외국인투자 유입, 건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2015년 초선, 2020년 재선에 성공한 두다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법과 정의당(PiS)의 지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으로 EU와 대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11. 1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6)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90), 항공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약('92), 사증면제교환각서('93), 문화협정('94), 과학기술협력협정('94),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99), 세관협력공조협정('00), 경제협력협정('05), 관광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1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0), 국방협력협정('14),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8)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5,314,955	5,639,354	6,595,63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 부품
수입	771,113	834,172	1,101,426	자동차 부품, 기타금속광물, 산업용 전자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326건, 4,804,903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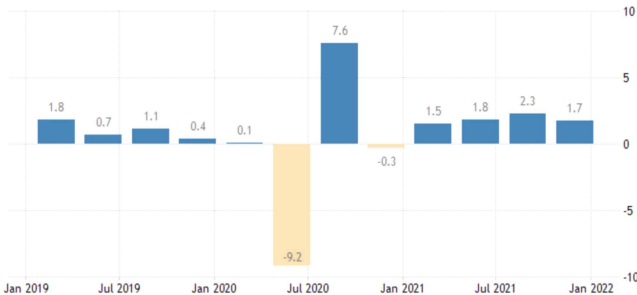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제성장률	4.8	5.4	4.7	-2.5	5.7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6	2.3	3.4	5.1
재정수지/GDP	-1.5	-0.2	-0.7	-7.1	-2.5

자료: IMF, EIU

### 2021년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총생산을 추월하는 급속한 경기 회복 달성

- 폴란드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2.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유럽연합(EU) 평균(-6.1%)을 상회함. 이는 근본적으로 2004년 EU 가입 이후 지속되어 온 강력한 성장세와 가계·기업 앞 재정지원에 따른 결과임.
- 2021년 들어 코로나19 위기 해소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2019년 4분기) 총생산을 이미 추월하였으며, 뒤이은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냄. 비록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차질을 빚었으나, 산업기반이 비교적 다각화되어 있어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에 2021년에는 5.7%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져 4%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 수출 감소 및 에너지 비용 증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편, EIU(2022. 4월)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취약하여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하였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은 하반기부터 산업 전반에 구체화되어 산업생산 실적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됨.

[그림 1] 폴란드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분기 대비 %)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Trading Economics

[그림 2] 폴란드 월별 경제활동 지표 추이  
(2018년 1월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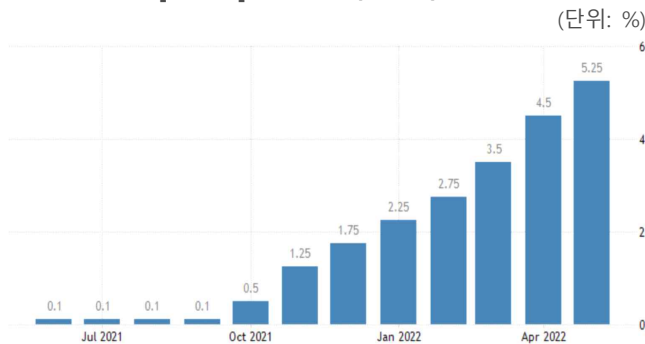
자료: IMF

## 국내경제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다소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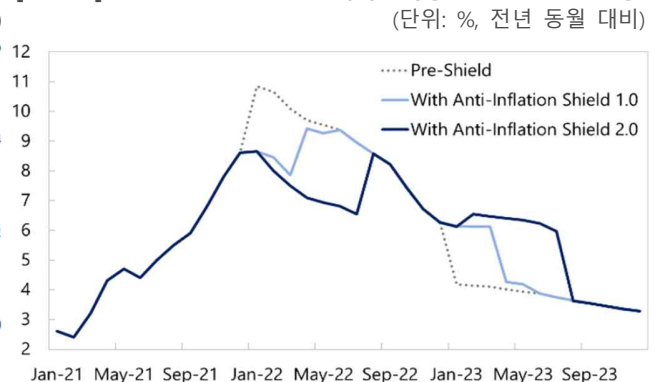
-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5.1%로 폴란드 중앙은행(NBP)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2.5±1%)를 상회하였음. 이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에 따른 유럽 에너지 대란 지속, 국제유가 상승세, 글로벌 공급 차질, 내수 회복,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명목임금 인상률 상승 등의 소비자물가 상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함. 최근 심화되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동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2년 2월 기업 부문 평균 명목임금은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11.7% 상승한 6,220즈워티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10.1%)를 상회하며 2000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부문별로는 교통(24.1%), 주거 및 에너지(17.7%), 외식·숙박(12.7%) 등이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였음. 또한, 전월 대비로는 3.3% 상승하여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 NBP는 이 같은 현상에 대응하여 2021년 10월 이후 2022년 5월 현재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총 8번, 0.1%→5.25%)해왔으며, 두다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조치(Anti-Inflation Shield)'를 2차례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제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12월 승인된 '인플레이션 대응조치 1.0'은 3개월간 전력 소비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23% → 5%), 천연가스 부가가치세율 인하(23% → 8%), 저소득 가구 앞 바우처 지급 등을 골자로 하였으며, 뒤이어 2022년 2월부터 실시된 '인플레이션 대응조치 2.0'은 6개월간 기초 식료품·천연가스 및 비료 부가가치세 전면 면제(0%), 연료 부가가치세율 인하(23% → 8%), 인하된 전력 부가가치세율 유지(5%) 등의 내용을 포함함. IMF(2022. 2월)에 따르면, 동 조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1.4%p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상당히 초과한 연평균 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폴란드 기준금리 추이



자료: NBP, Trading Economics

[그림 4] 폴란드 월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폴란드 통계청(GUS), IMF(2022년 1월 전망)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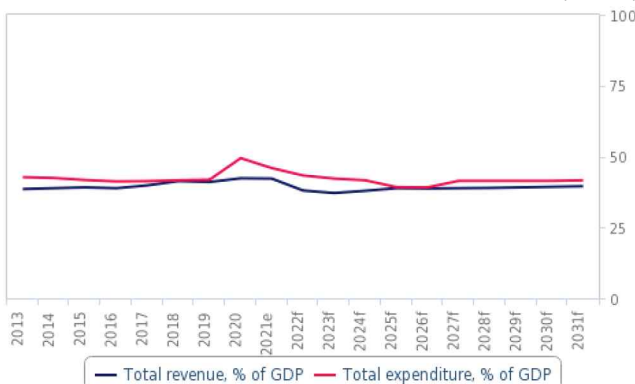
### '폴리시 딜(Polish Deal)' 프로그램 실시 등에 따른 재정부담 고조 우려

- 2021년 폴란드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5%로 전년(-7.1%) 대비 대폭 개선되었으며, 이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전반적인 경기부양책 축소에 따른 재정지출 삭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중산층 강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헬스케어 지출 확대, 청년가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폴리시 딜(Polish Deal) 프로그램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됨.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세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도입된 '인플레이션 대응조치'로 인해 폴란드 재정의 주 수입원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2.5%) 대비 악화될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IMF(2022. 2월)에 따르면, 폴리시 딜 프로그램 및 인플레이션 대응조치는 2022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각각 약 1%p, 0.8%p만큼 악화시킬 것으로 관측됨.

### EU에 대한 높은 재정의존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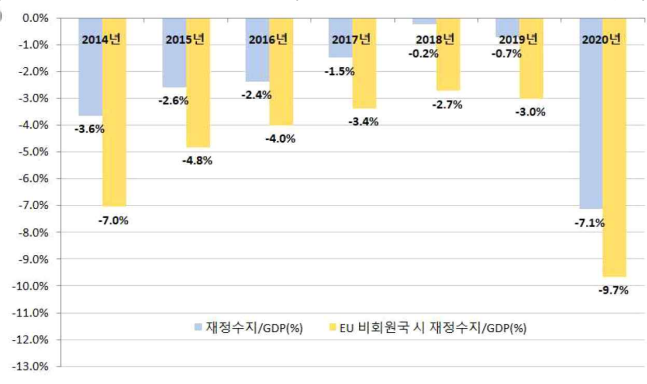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폴란드는 2014~20년 28개 회원국 앞 EU 총예산지출 누적액 9,006억 3,812만 유로 중 1,041억 5,969만 유로(11.6%)를 수령하여 28개 회원국 중 수령액 1위를 차지하였음. 이는 동 기간 폴란드의 재정수입 누계액(1조 3,210억 4,200백만 유로) 대비 7.9%에 해당하며, 폴란드의 대EU 재정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나타냄.
- 폴란드는 향후 2027년까지 EU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투자 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EU와 폴란드 간 사법 갈등이 심화될 경우, EU의 폴란드 앞 자금 집행이 영향을 받아 중대한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림 5] 폴란드 GDP 대비 재정 수입·지출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폴란드 재무부, Fitch Solutions

[그림 6] 2014~20년 폴란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실제 수치와 EU 비회원국일 경우 비교, %)



• EU 비회원국일 경우의 재정수지 = (재정수입 - EU 예산 수령액) - (재정지출 - EU 예산 기여액)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stat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상수지	-2,068	-7,537	2,832	17,319	-3,895
경상수지/GDP	-0.4	-1.3	0.5	2.9	-0.6
상품수지	-463	-7,327	1,699	14,379	-462
상품수출	228,214	256,230	260,732	269,991	331,177
상품수입	228,677	263,557	259,033	255,612	331,639
외환보유액	108,019	110,384	115,823	138,513	145,153
총외채	383,047	362,192	354,980	375,353	356,739
총외채잔액/GDP	72.7	61.7	59.5	62.9	52.9
D.S.R.	26.5	26.1	25.8	24.7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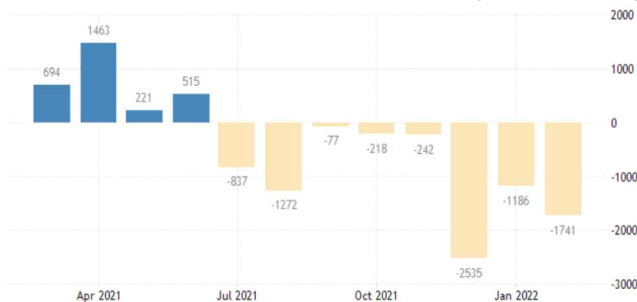
자료: IMF, EIU

### 경기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당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 2021년 내수 회복,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상품수출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해 상품수입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나타냄. 또한, 자국 내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당 증가에 따라 본원소득수지가 전년보다 악화되어, 2021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0.6%를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 폴란드 본원소득 지급 추이(억 달러, IMF, EIU) : ('17)352 → ('18)386 → ('19)385 → ('20)346 → ('21)442
- 한편, 2022년에는 대러 경제 제재 심화에 따른 수출 규모 위축,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 내외로 악화될 전망이다.

[그림 7] 폴란드 월별 상품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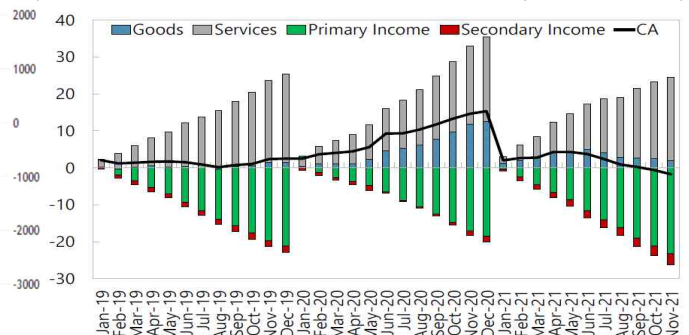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자료: NBP, Trading Economics

[그림 8] 폴란드 월별 누적 경상수지 추이

(단위: 십억 유로)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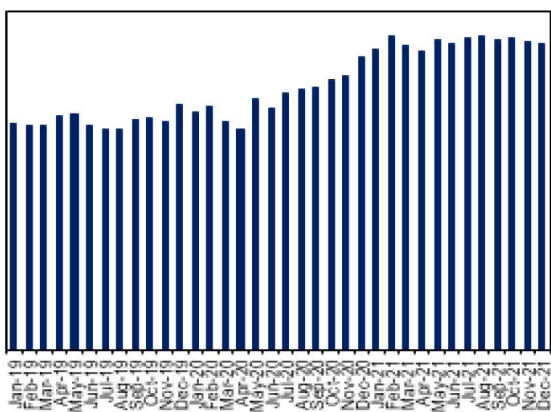
## 대외거래

### 양호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확보

- 2020년 폴란드의 상품수지가 전년 대비 746.3% 폭증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도 GDP 대비 2.9%의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2020년 말 폴란드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1,158억 달러, 월평균수입액의 4.1개월분) 대비 19.6% 증가한 1,385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5개월분)를 기록하였고, 2021년 말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회복, EU의 자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전년(1,385억 달러) 대비 4.8% 증가한 1,452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4.1개월분)를 기록하였음. IMF(2022. 2월)에 따르면, 이는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권고 수준의 150%를 상회하므로,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EIU(2022. 4월)에 따르면, 즈워티화 가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견조한 대내 경제지표 및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환위험은 폴란드 중앙은행(NBP)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이 과정에서 환변동 대응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소진될 우려가 있음.
-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심화로 즈워티/유로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자, NBP가 과도한 환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한 결과 폴란드의 외환보유액은 2월 말 1,393억 달러로 전년 말(1,452억 달러) 대비 4% 감소한 바 있음.

[그림 9] 폴란드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NBP, Fitch Solutions

[그림 10] 폴란드 현물환율 추이

(단위: 즈워티/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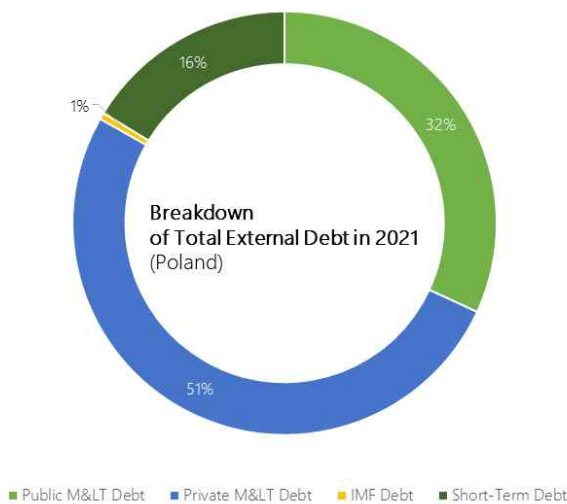
자료: Trading Economics

## 외채상환능력

### 외채 관련 지표는 전년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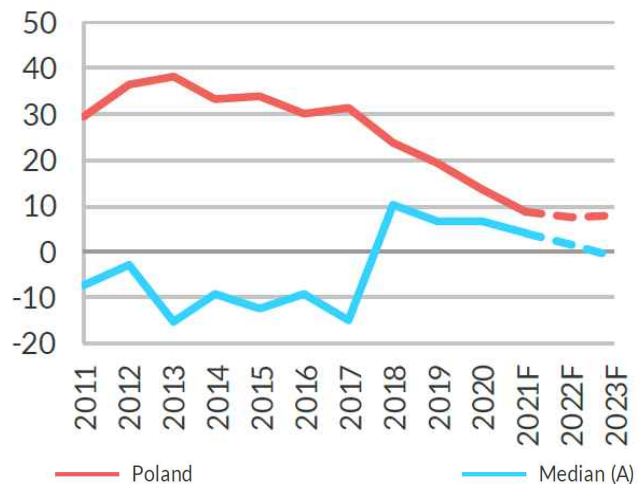
- 2021년 폴란드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경제 회복에 따른 총생산 증가, 총외채잔액 감소 등으로 전년(62.9%) 대비 개선된 52.9%를 기록하였으며, D.S.R도 총수출 회복으로 전년(24.7%)보다 양호한 21.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폴란드의 총외채잔액(3,567억 달러) 중 단기외채잔액은 581억 달러(16%), 중장기외채잔액은 2,968억 달러(83%)임. 또한, 중장기외채잔액 중 민간외채는 1,830억 달러(62%), 공적외채는 1,137억 달러(38%)임.
- EIU(2022. 4월)에 따르면, 폴란드의 총외채잔액 규모는 2021년 3,567억 달러에서 2027년 4,025억 달러로 증가하겠으나,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21년 52.9%에서 2027년 37.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Fitch(2021. 9월)에 따르면 폴란드의 취약한 대외재정 구조는 역사적으로 국가신용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해왔으나,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순외채잔액\* 비중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대외재정 관련 지표가 Fitch 신용등급이 A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취약한 편에 속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이 요구됨.
  - \* 총대외채무잔액 - 총대외채권잔액
- 폴란드 GDP 대비 순외채잔액 비중 추이(% , Fitch) : ('17)31.6 → ('18)23.7 → ('19)19.1 → ('20)13.5 → ('21)8.7

[그림 11] 2021년 폴란드 총외채잔액의 요소별 비중



자료: EIU

[그림 12] 신용등급 A 국가 및 폴란드 GDP 대비 순외채잔액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Fitch Ratings



##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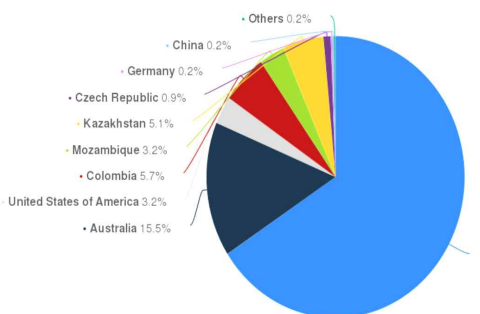
### EU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 아시아와의 교역 증가세

- EU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는 오래전부터 폴란드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여겨짐. EU는 2020년 폴란드 수출의 74% 및 수입의 67%를 차지하는 등 폴란드의 거시경제 상황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EU 역내에서도 특히 독일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EIU(2022. 3월)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 기준 폴란드 수출의 29.1% 및 수입의 27.7%를 차지함.
- 폴란드는 EU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교역상대국 다변화가 주요 과제로 간주됨.
- KOTRA(2022. 1월)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2020년 중국 앞 수출액은 34억 달러로 전년(29.6억 달러) 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한국 앞 수출액은 7.4억 달러로 전년(7억 달러) 대비 6% 증가하였음.

###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최근 공급원 다각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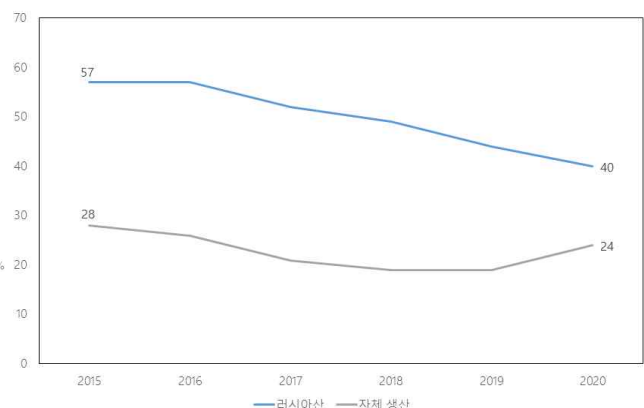
- 미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0년 기준 총 전력생산의 72%를 석탄(무연탄 47%, 갈탄 25%)에, 9%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석탄 및 천연가스를 주로 수입해 왔음. 이에 폴란드의 석탄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70%에 육박하며, 폴란드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40%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음.
- 이처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맞대응이 폴란드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PIE) 및 KOTRA(2022. 3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교역 감소가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힘. 석탄의 경우 현재 폴란드 국내 소비량의 80%가 자국산이며, 러시아산 비중은 8.5%에 불과함.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폴란드 내 보유량이 충분하며 정부 차원에서 자체 생산 활성화 및 공급원 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그림 13] 2020년 폴란드 석탄 수입원의 국가별 비중



자료: UN Comtrade, Statista

[그림 14] 폴란드 천연가스 공급원의 러시아산 및 자체 생산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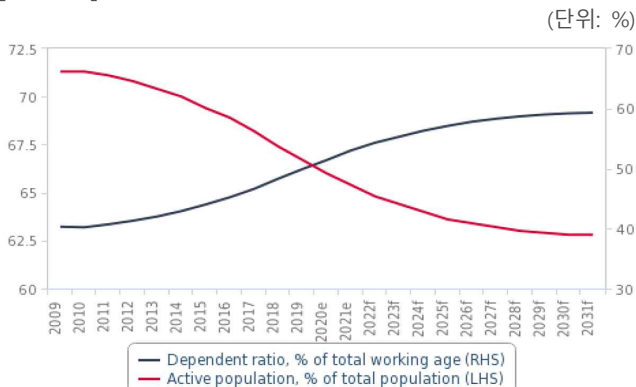
자료: EU ACER

## 성장잠재력

###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속, 노동시장의 초과수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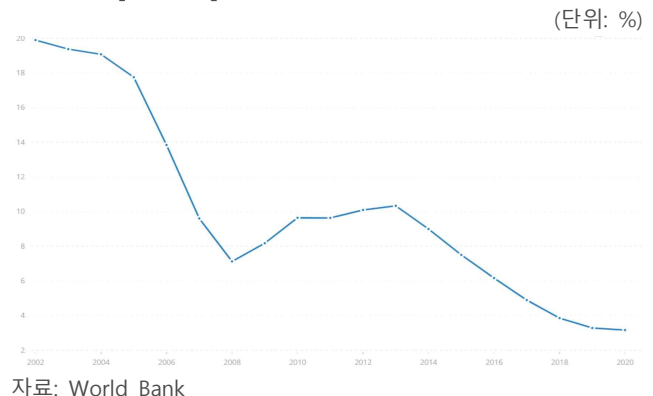
- Fitch Solutions(2022. 2월)에 따르면, 폴란드가 마주한 가장 주요한 성장 제약요인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임. 폴란드의 인구는 여타 EU 회원국들로의 대규모 이주, 인구대체율(여성 1인당 2.1명)을 다소 하회하는 출산율(2019년 기준 1.42명) 등으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 또한, 이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와 신규 일자리 증가는 노동시장의 초과수요를 심화시키고 있음.
-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후 총 22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폴란드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는 폴란드 현지 산업생산 호황, EU 기금 투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만성화되었던 폴란드의 높은 실업률이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이와 함께 노동의 초과수요가 심화되어 폴란드 자체 노동인구로는 노동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였고, 임금 및 해외 이주 근로자 고용이 꾸준히 높은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임금 상승)** 폴란드 통계청(GUS)에 따르면, 2021년 말 폴란드의 평균 명목임금은 5,995.09즈워티로 전년 말(5,456.81즈워티) 대비 약 10% 상승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임금 인상 압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해외이주 근로자 고용 증가)** 폴란드 연금공단(ZUS)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해외이주 근로자 수는 818,772명으로 전년 동기(603,481명) 대비 35% 증가하였음. 한편, KOTRA(2022.1월)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해외이주 근로자 고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잡한 채용절차, 근로 허가서 및 거주증의 발급 기간 지연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계속될 경우, 부양비(Dependent Ratio,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의 합인 백분비)는 60%로 증가할 것이며 경제활동인구(Active Population)는 총인구 대비 65%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사회보장지출 증가, 소득세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정부재정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정부가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 활로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법과정의당(PiS)은 2015년 총선 승리 후 2016년 2월 'LODZINA 500+' 추진 근거법을 제정하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둘째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500즈워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또한, 정부 및 여당은 우크라이나 및 여타 CIS 국가들로부터의 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해왔으나, 이들은 주로 저부가가치 산업에 한정된 단기적인 완화책들로 장기적인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

[그림 15] 폴란드 부양비 및 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자료: UN, Fitch Solutions

[그림 16] 폴란드 연평균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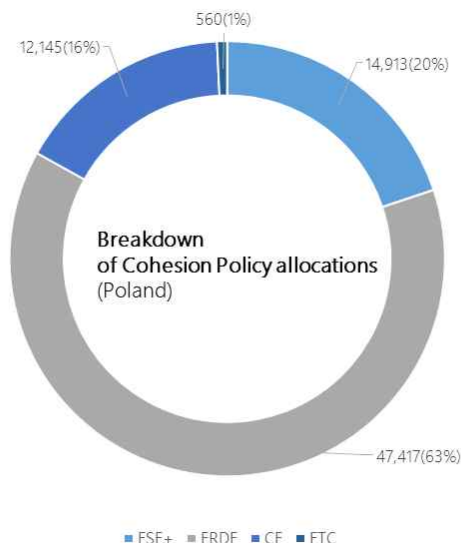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 성장잠재력

### EU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보

- 폴란드는 2021~27년 EU로부터 약 1,364억 유로 규모의 막대한 보조금 및 342억 유로 규모의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받기로 되어있으며, 동 자금은 폴란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이 중 239억 유로의 보조금은 '차세대 EU 발전기금(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인 EU 경제회복기금으로부터, 약 750억 유로의 보조금은 2021~27년 EU 장기예산안 중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국가·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EU 단일시장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배정됨. 이는 2022년 GDP 전망치의 약 16%에 달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추경 없이 통신 및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등에 대한 공공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750억 유로 규모의 결속정책 예산 중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기술발전, 혁신, ICT 등 지원) 예산은 474억 유로(63%), 유럽사회기금(ESF+: 실업, 빈곤, 차별 극복 등 지원) 예산은 149억 유로(20%), 결속기금(CF: 환경시설, 기후변화, 자원이용 등 지원) 예산은 121억 유로(16%)를 각각 차지함.
- 그러나 2018년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하원에 법관 인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폴란드와 EU는 사법 통제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으며, 2022년 2월 16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법을 위반하는 회원국에 대해 EU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EU법에 반한 폴란드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예산 삭감을 단행할 것으로 우려됨.
- Fitch Solutions(2022. 2월)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각각 2021년 4월과 5월에 발표한 국가재건계획(Krajowy Plan Odbudowy, KPO)과 폴리시 딜(Polish Deal) 프로그램의 실시는 상당 부분 EU 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EU와의 갈등 심화로 지원금 지급이 계속 유보될 경우 폴란드 정부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역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7] 2021~27년 EU 장기예산안 중 기금별 폴란드 결속정책 배정 예산 규모 및 비중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U 집행위원회

[그림 18] 폴란드 국가재건계획(KPO) 분야별 주요 지출계획

분야	규모(유로)	비중
경제 회복력 및 경쟁력 제고	47억	13%
녹색 에너지 및 에너지 소비 감소	75억	21%
디지털 전환	49억	14%
의료 시스템의 효과성, 접근성 및 질 향상	45억	13%
친환경 및 지능형 이동수단 개발	143억	40%
총 합	359억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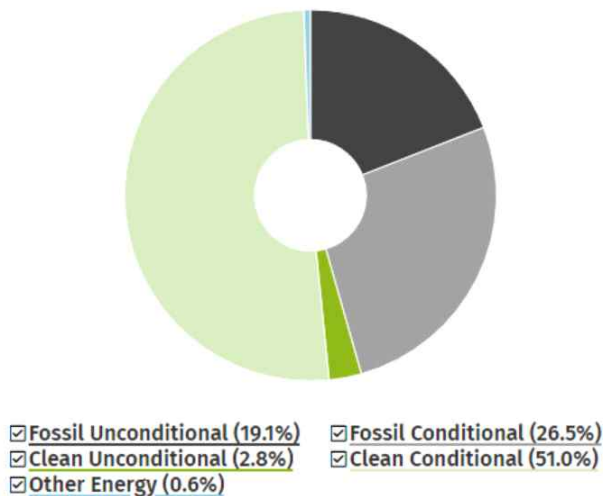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개발기금 및 지역정책부

## 정책성과

###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실시에 따른 녹색성장 추구

- WHO의 2016년 대기 질 조사에 따르면, 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유럽 50개 도시 중 33곳이 폴란드 도시인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 비중이 80%에 달하는 폴란드의 에너지 공급 상황과 맞물려,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함.
- 폴란드 정부는 2015년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2019년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2021년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제정 등 탄소중립 목표를 추구하는 EU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PEP 2040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화석연료 탈피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산업생산 증가 및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함. 이에 현재 폴란드 정부는 화석연료와 청정에너지에 대하여 비교적 균형적인 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녹색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2019년 12월 EU 정상회의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 딜에 합의하였으나, 폴란드 정부는 이에 비동의하였음. 이는 ①폴란드의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 2050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점, ②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구조적 실업이 예상되는 점 등에 기인함.
- 비영리 단체인 Energy Policy Tracker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2020년 초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최소 142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관찰되며, 이 중 청정에너지 지원 규모는 76억 달러(53.8%), 화석연료 지원 규모는 65억 달러(45.6%)를 기록하였음.
- 청정에너지 지원 규모 중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화석연료 지원 규모 중 조건부 지원(Fossil Conditional) 규모가 무조건 지원(Fossil Unconditional) 규모보다 약 10억 달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폴란드 정부가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9] 2020년 이후 폴란드 정부의 에너지별 정책지원 비중



자료: Energy Policy Tracker

[그림 20] Energy Policy Tracker의 에너지 분류 정의 및 2020년 이후 폴란드 정부의 에너지별 정책지원 규모

구분	정의	지원액(달러)
Fossil Unconditional	기후목표, 오염물질 감축 등의 조건 없이 화석연료의 생산 및 소비 지원	27.1억
Fossil Conditional	기후목표, 오염물질 감축 등을 조건으로 화석연료의 생산 및 소비 지원	37.7억
Clean Unconditional	청정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지원	4억
Clean Conditional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지원	72.4억
Other Energy	그 외	0.8억
총 합계		142억

자료: Energy Policy Tracker

##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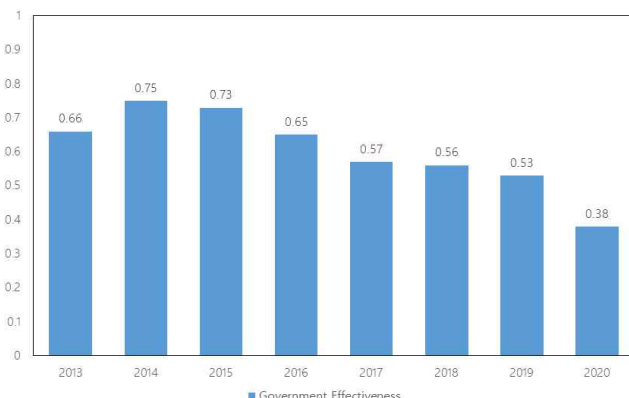
### 2014~20년 EU 기금을 바탕으로 인프라, 환경 등의 부문에서 양호한 정책성과 시현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폴란드는 2014~20년 총 911억 유로의 EU 구조투자기금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이는 2014년 인구 기준으로 1인당 2,400유로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임. 분야별로는 '교통 및 에너지 분야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가장 큰 규모인 236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119억 유로, '저탄소경제 실현'에 100억 유로, '환경 보호 및 자원 효율성 제고'에 93억 유로, '사회적 포용'에 87억 유로 등이 배정되었음.
- 폴란드 정부는 상기 예산에 202억 유로 상당의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7개의 국가 단위 프로그램과 17개의 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2년 3월 현재까지 총 57,311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음.
- 총 57,311개 기업 중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9,360개, 보조금 이외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16,543개, 비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은 8,809개, 스타트업 기업은 1,547개임.
- 또한, 2022년 1월 기준 1,466km의 도로 건설, 1,619km의 도로 보수, 97km의 내륙 수로 건설 및 개선, 연간 48,309톤의 쓰레기 재활용, 21,179헥타르의 서식지 보호, 1,110MW의 재생에너지 생산, 192만 헥타르의 유기농 지원이 완료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EU 기금을 바탕으로 한 정책성과가 확인됨.

### 정부 효율성은 악화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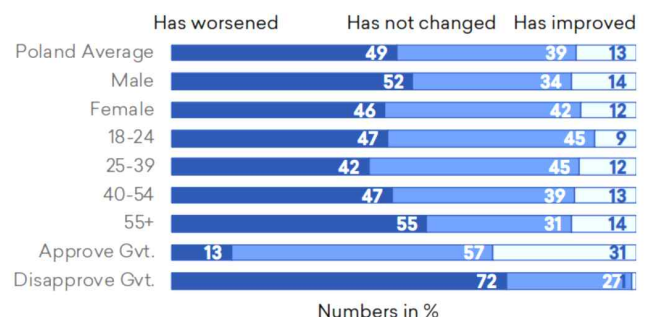
- 세계은행의 2020년 정부효율성 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2.5점~2.5점) 조사에 따르면, 폴란드는 0.38점으로 세계 192개국 중 60위를 차지하며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는 2014년(0.75점)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6년(0.37점)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것임.
- EIU(2022. 3월)에 따르면,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결정과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이 거둬지며 정부 기능(Functioning of Government)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미국의 비영리 조사기관 More in Common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폴란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가 '악화되었다'고 답한 데 반해 '개선되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3%에 불과했음.

[그림 21] 2013~20년 폴란드 정부효율성 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그림 22] 코로나19 이후 폴란드 정부신뢰도 변화 여부 조사



자료: More in Common (조사기간: 2020년 7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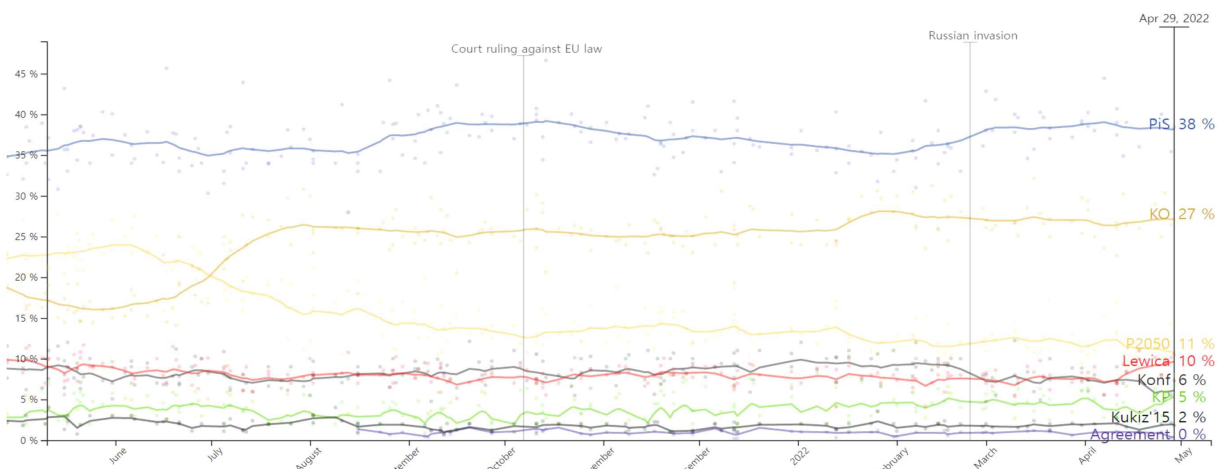


## 정치안정

### 법과정의당(PiS)의 안정적인 지지율 확보, 범여권 통합 우파 내 갈등 지속

- 2019년 총선에서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군소 우파 정당과 함께 43.6%의 투표율로 상·하원 다수석(상원 48/100석, 하원 235/460석)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 대선에서 법과정의당의 안제 이 두다 후보가 시민 연단(K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를 2%p 차로 근소하게 제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면서 법과정의당의 영향력이 더욱 공고해짐. 법과정의당은 2015년 이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35%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음.
- 비록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 결정과 코로나19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제1야당인 시민연단(KO)의 지지율이 27%선에 머물러 있어 2023년 총선까지 법과정의당의 지지기반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임.
- 한편, 2015년 총선을 계기로 법과정의당을 주축으로 범여권 통합 우파(United Right)가 결성되어 지난 대선 및 총선 승리를 이끌었으나, 2019년 군소 연대주의 정당인 자유와연대당(WiS)이 대러 정책 관련 갈등으로, 2021년 중도우파 정당인 합의당(Agreement)이 언론법 개정 관련 갈등으로 범여권 통합 우파를 탈퇴하면서 하원 내 과반을 상실(235석 → 227석)하였음. 또한, 하원 19석을 보유한 극우 정당인 통합폴란드당(SP)이 정부 및 여당보다 한층 더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성소수자 인권, EU 경제 회복계획 등 주요 의제를 둘러싸고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지속하여 향후 범여권 분열이 우려됨.
- 통합폴란드당 대표인 즈비그니우 지오브로 법무부 장관은 2021년 8월 EU로 인해 폴란드식 사법개혁을 철회할 이유가 없으며, EU와 지속적으로 충돌할 경우 폴란드가 무조건 EU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유럽 회의주의적(Eurosceptic) 입장을 이어가고 있음.
- Fitch Solutions(2022. 2월)에 따르면, 지오브로 장관과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범여권 통합 우파를 이끌 차세대 후보로 함께 거론되는 가운데, 지오브로 장관이 EU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수록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동조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경향은 향후 EU 기금을 기초로 한 폴리시 딜(Polish Deal) 프로그램 등 개혁안의 무산으로 이어져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23] 2020년 5월 이후 폴란드 정당별 지지율 추이



자료: Politico. 2022년 4월 29일 기준



## 사회안정

### 여성 및 성소수자 권리 제한, 언론 통제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격화

- **(낙태 제한)** 가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기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음. 이후 2021년 9월 임신 22주 차의 30세 임신부가 위험 상황에서 낙태 시술을 하지 못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짐.
  -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여당 지지자들은 낙태 제한 조치가 죽음을 야기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인권 운동가들이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지속됨.
- **(성소수자 없는 구역)** 두다 대통령은 2020년 재선 당시 '동성애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음. 정부는 자국 내 '성소수자 없는 구역(LGBT Free Zone)'을 지정하고 성소수자의 입양 금지 정책을 실시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시민단체 및 EU의 반발을 야기함.
  - 이에 대응하여 EU는 2021년 3월 10일 EU 회원국 27개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 구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한 바 있음.
- **(언론 통제)** 2021년 8월 폴란드 하원이 통과시킨 언론법 개정안에 따라 EU 소속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폴란드에서 방송사를 소유·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미 Discovery사가 소유한 대형 뉴스 채널 TVN24의 면허 갱신을 저지하여 정부의 대내 언론 통제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우파 연정이 붕괴되는 등 갈등이 격화됨.
  - 국경없는기자회(RSF)의 2021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폴란드는 세계 180개국 중 64위를 차지하며 2015년(18위) 이후 언론의 자유 수준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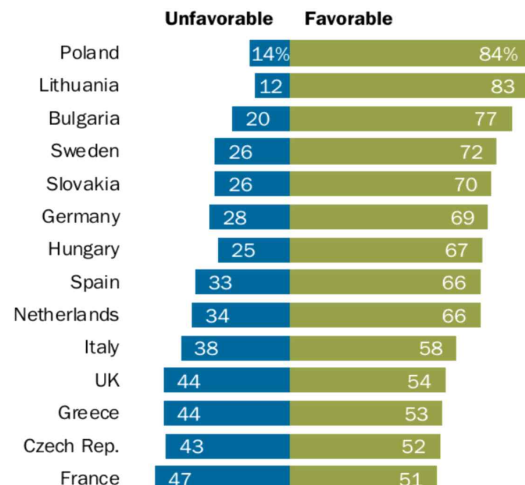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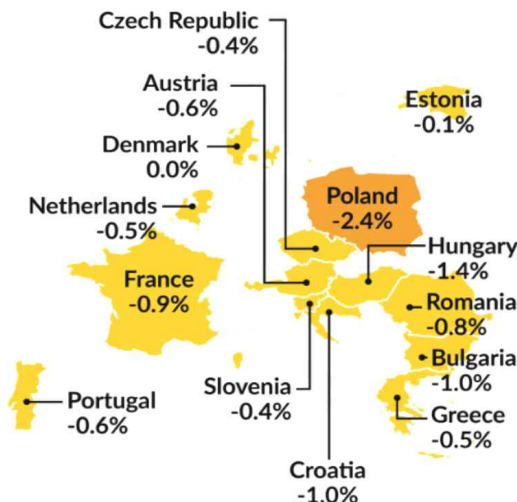
- Moody's(2021. 11월)는 ESG 요소가 폴란드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 판단하여 ESG 신용영향점수를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 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모든 영역에 걸쳐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지 않으나, 전체 에너지 공급 중 석탄의 높은 비중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탄소전환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노동참여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제·재정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또한, 지역 및 도농 간 고용·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정치적 긴장이 우려되어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사법부 독립 침해 관련 이슈가 있으나, EU 가입 후 제도적 질이 개선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견고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것으로 보임. 재정준칙을 기반으로 한 높은 재정정책 효율성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성·독립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반(反)법치주의 행보로 EU와의 관계 악화

- EU는 사법부 독립, 성소수자 인권, 난민 등의 이슈를 둘러싸고 폴란드 정부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2021년 자국 헌법이 EU법에 우선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음.
- 2015년 출범한 두다 행정부와 법과정의당은 사법개혁을 빙자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침해해 왔음. 구체적으로는 법관의 정년 단축 및 정년도달 법관의 임기연장 관련 법무부 장관 앞 재량권 부여, 하원 앞 법관인선위원회 위원 지명권 부여, 법관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사법부를 정권에 예속시키고자 했음.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상기 사법개혁이 EU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유럽 사법재판소(ECJ)에 EU 조약 위반을 근거로 폴란드를 수차례 제소하여 승소하였음.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법 우위의 원칙을 내세운 ECJ의 판결에 반발하여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0월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폴란드 헌법이 EU법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하여 EU 집행위원회 및 주요 EU 회원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EU 차원에서 폴란드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벌금 부과 등을 통한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 ECJ는 2021년 10월 27일 법관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라는 EU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폴란드에 하루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하였으며, 2022년 2월 16일 민주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향후 폴란드 앞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EU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EU 회원국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폴란드 국민의 80% 이상이 EU 잔류를 지지하고 있으며, 모라비에츠키 총리 역시 폴렉시트(Polexit) 관련 위험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함. 또한,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폴란드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폴란드가 EU 기금 지원의 최대 수혜국인 만큼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24] 2021년 유럽 주요국의 법치주의 지수 전년 대비 증감률 [그림 25] 2019년 주요 EU 회원국 국민들의 EU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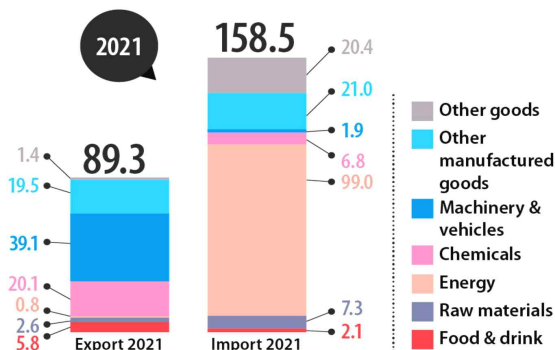


## 국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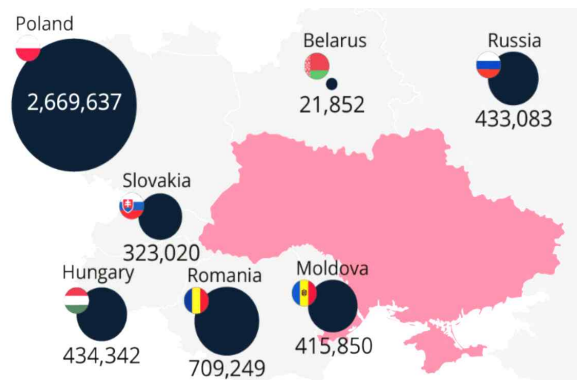
###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 지속

- 폴란드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하여 다소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와 약 6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부 최전선으로서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짐.
-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 2022년 3월 13일 폴란드 국경에서 약 25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야보리우 군사훈련 기지에 러시아군이 30발 이상의 미사일 폭격을 가하여 우크라이나군 등 35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짐.
- 한편,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여타 서방 동맹국들과 합심하여 러시아에 대해 중대한 교역·금융 제재를 부과하였으나, 에너지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EU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 전력생산의 8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폴란드 역시 석탄 및 천연가스를 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므로, 대러 에너지 제재가 실현될 경우 공급 혼란을 경험할 것으로 우려됨.
- Eurostat(2022. 3월)에 따르면 EU는 2021년 러시아로부터 990억 유로 상당의 에너지를 수입함. 또한, EU의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원유 26.9%, 천연가스 41.1%, 석탄 46.7%에 달함.
- 그러나 폴란드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강력한 대러 제재 도입을 주장하며 선봉에 서 있음. 폴란드 정부는 대러 에너지 제재를 두고 EU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 금지 조치 요구가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되자, 폴란드 정부는 3월 29일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 중단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4일에는 러시아산 석유, 석탄 및 천연가스 수입을 연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힘.
- UN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4월 중순까지 26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피난하였음.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합법적 체류 보장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준비 중임.

[그림 26] 2021년 상품분류별 EU의 대러 수출입 규모 [그림 27]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주요 피난처 및 피난 규모  
(단위: 십억 유로)



자료: Eurostat



자료: UNHCR, Statista. 2022년 4월 13일 기준

## 외채상환태도

###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폴란드는 공산권 붕괴 후인 1991년 파리클럽에서 당시 외채규모의 50%를 탕감받고 채무상환 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까지 해당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현재 파리클럽 채무 잔액은 없음.
- 한편, 1994년 대기성차관(SBA) 지원 이후로 IMF의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IMF와 2009~17년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 한도를 설정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였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A2 (2021.11)	A2 (2021.04)
Fitch	A- (2022.02)	A- (2021.08)

###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기존 등급 유지, EU와의 갈등을 위험요인으로 평가

- 2020년 이후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산업다각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EU와의 갈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Moody's(2021. 11월)는 견조한 거시경제적 틀 구축,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2(Stable)로 유지하였으나, 사법체계 혼란, EU와의 갈등 지속, 인구 고령화 심화 등이 국가신용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 Fitch(2022. 2월)는 양호한 성장세, 재정적 개선 및 채무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폴란드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Stable)로 유지하였으나, EU와의 갈등 심화, 지배구조 및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이 국가신용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힘.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5%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던 폴란드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해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견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021년 5.7%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러 수출 감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산업생산 둔화,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4%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전년(-7.1%) 대비 대폭 개선된 -2.5%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배당 해외송금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0.6%의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5년 이후 법과정의당(PiS)과 두다 행정부는 35%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해왔으나, 자국 내 시민단체, 언론 및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 권리 제한, 언론 통제 등 반(反)법치주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며 정치·사회·외교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재정 및 교역의존도가 높은 EU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대내외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